

투자 촉진 사회를 위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국내 경제의 회복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은 투자 활성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투자 활성화 논의에서 늘 격론이 벌어지는 두 가지 논점이 있다. 하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를 막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투자를 억제하는 반기업 정서가 實在하느냐 하는 문제다. 사실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근본 원인은 경제 여건의 구조적인 악화에 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본이 축적되고 산업구조가 성숙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투자 수익률 하락과 새로운 투자처 부재 등이 투자 부진의 제일차적 원인이다. 게다가 외환 위기 이후의 이전과 전혀 다른 경영 여건이 기업들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금융 기관들은 위험 부담이 있는 기업 대출을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잡은 외국 자본에 배당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외 투기적 자본들의 적대적 M&A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여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나마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를 가로막는 요소가 바로 정부 규제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들의 출자를 제한하는 출총제이다. 이 제도를 가급적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한 반론은 투자와 출자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투자 유형을 실물 투자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다. 국내 기업의 성장 과정을 보면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출자를 통한 기업 인수 후 추가적인 실물 투자를 통해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사례가 허다하다. 다음으로 예외 규정이 많아 투자에 애로가 없다는 설명이다. 예외 규정의 실효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럼 그렇게 예외가 많은 누더기 제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또 대기업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하나 이 제도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상위 기업보다는 중견기업들이다. 이 제

도에 묶여 있는 한 6조 규모의 국내 기업들이 10조, 100조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꿈을 꾸기도 어렵다. 출총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속내는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憂國志士적 충정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 노동, 공공 부문의 3대 경제 부문에서 가장 혹독하고 철저하게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분야는 바로 기업 부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회계, 감사, 기업 공시 부문 등에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감시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 사회에 기업 활동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는 반기업 정서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 반기업 정서가 아니라 반기업인 정서라 한다.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발생 원인으로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불순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이는 국내 사법권을 영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이 유능한 관료와 창조적인 기업가들의 환상적인 조화로 인해 실현된 것으로 찬사를 보냄도 인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나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잦은 노사 분규 등으로 경영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점도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 기업도 정부나 근로자들처럼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제 이와 함께 기업인들이 기업을 만드는 주체요 이들을 통해 그동안 우리 경제가 이만큼이나 성장해 왔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기업(인) 정서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기업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높여주는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사라져야 한다. 이래야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인들이 모험적 창의성을 발휘해 자신의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신명나게 투자를 하는 '투자 촉진 사회'가 될 수 있다.